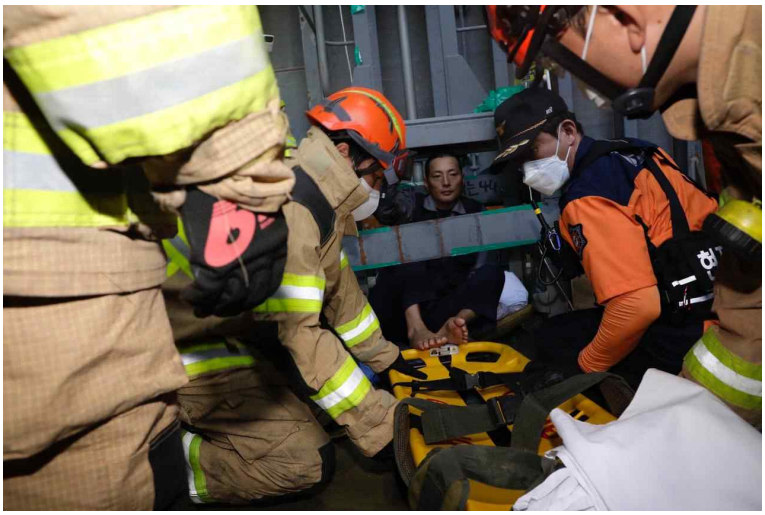
금속노조통신 048호

발행일 2022년 07월 25일(월) | **발행인** 윤장혁 | **SNS** 페이스북 · 카톡채널 ⌕금속노조 | **편집** 선전홍보실 ☎ (02)2670-9507

대우조선하청노동자 파업 교섭 합의

22일 오후 잠정합의안 조합원 총회 가결 … "한국 사회에서 의미 있는 승리 거둬"



금속노조와 '대우조선해양 사내협력사 협의회'가 잠정합의한 안을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가 총회에서 확정했다. 노조는 조합원 총회 결과 가결을 확정하면 옥포조선소 1도크 점거 농성을 해제하겠다고 발표했다.

노조는 7월 22일 오후 ▲임금인상 4.5% ▲명절, 휴가상여금 ▲대우조선지회 임단협 결과 따른 성과금 ▲조선하청 저임금 대책팀 구성 ▲폐업, 폐업 예정 업체 노동자 내용상 고용 승계 ▲파업에 따른 민·형사상 면책 추후 협의 등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는 잠정합의안을 두고 총회를 열었다. 118명이 투표해 찬성 109표, 반대 9표로 잠정합의안을 확정했다.

잠정합의안 찬반투표에 나선 한 조합원은 "금속노조 이름으로 투표용지에 도장을 찍는다니 가슴이 벅차오른다"라고 소감을 밝혔다.

다른 조합원은 "아쉬움과 만족감이 함께 있다. 당당하게 한 발 한 발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내다봤다.

금속노조는 합의 직후 발표한 성명을 통해 "51일 동안 벌인 조선하청노동자 투쟁이 한국 사회에서 의미 있는 승리를 거뒀다"라며 "조선하청노동자가 노동조합의 주체로 당당히 올라섰다"라고 평가했다.

노조는 0.3평 감옥에 자신을 가둔 유최안, 고공에 올라간 진성현, 조남희, 이학수, 박광수, 이보길, 한승철, 단식농성을 벌인 계수정, 최민, 강봉재 등 파업에 나선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의 투쟁이 "전국 조선하청노동자, 전국 비정규직 노동자, 최저임금 노동자, 공단의 미조직 노동자의 깃발이었다"라고 강조했다.

노조는 "투쟁에 힘 보탠 모두가 함께 만든 승리"라면서 "금속노조는 조선하청노동자 처우개선을 위해 다시 힘을 모으려 한다"라고 밝혔다.

노조는 "전국 조선하청노동자의 저임금 구조를 개선하고, 고용과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해야 조선산업의 미래를 만들 수 있다"라면서 "조선하청노동자들이 그림자 노동자로 살지 않도록 한국 사회가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라고 호소했다.

금속노조는 사측과 수구언론의 분열에도 불구하고 민주노조를 지킨 대우조선지회 조합원들과 비폭력 원칙을 고수하고 강한 단결로 파업을 사수한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들을 언급하며 "연대는 우리의 투쟁 동력이고 단결은 우리의 무기"임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

저임금 · 산재 · 산재 은폐 조선하청 현장, 21세기 '지옥'

대우조선하청노동자 투쟁 긴급인권 보고서 발표회 … "조선소 하청구조 전반 실태조사 절실"

인권활동가들이 대우조선 1 도크 진수를 가로막는 진짜 범인은 정부와 산업은행, 대우조선해양 원청이라고 고발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투쟁 인권운동 긴급대응팀'(이하 긴급대응팀)과 인권운동더하기(전국 53개 인권단체)가 7월 21일 오후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대우조선 하청노동자 파업 긴급인권보고서 발표회' 를 열었다.

긴급대응팀은 다산인권센터,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노동위원회,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인권운동공간 활, 서울인권영화제,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등으로 구성했다.

김혜진 전국불안청노동철폐연대 상임활동가는 한국 조선산업의 복잡한 고용구조가 노동자 처우와 임금을 왜곡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혜진 활동가는 "정부와 원청이 현재 조건과 상태를 개선하지 않고 이주노동자 인력을 확대하겠다는 주장을 하는데, 더 열악한 일자리로 만들겠다는 꼼수다" 라며 비판했다.

이광훈 금속노조 경남지부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 조합원은 현장 증언에서 "조선소 현장에 일하러 왔을 때 선배들이 신용불량자냐고 물었다. 그만큼 열악한 현장이었다" 라며 "이런 현장을 바꾸지 않으면 조선소 인력 문제와 산재 문제가 더 심화할 것이다" 라며 파업의 이유를 설명했다.

산재 은폐도 심각했다. 이광훈 조합원은 "파업 중에 하청노동자가 높이 1.8m 자재 위로 얼굴부터 추락하는 산재사고가 발생했는데, 팀장이 입원하라는 의사 말을 무시하고 출근 지시해 다음 날 바로 출근했다" 라고 전했다. 이 조합원은 "팀장이 재해자에게 출근만 찍고 퇴근하면 하루 일당을 쳐준다며 다친 하청노동자를 설득했다" 라고 산재 은폐 실태를 고발했다.

이광훈 조합원은 "지회가 산재 신청해야 한다고 설득했지만, 결국 고용불안과 임금삭감 등 팀장 눈치를 보며 신청을 포기했다" 라고 밝혔다. 이광훈 조합원은 "조선소 현장에 팽배한 착취구조를 바꾸기 위해 단체협약이 필요했다. 그래서 파업했다" 라고 증언했다.

이용우 민변 노동위원회 위원장은 "사측은 매일 수백억 원 손해가 발생한다면서 협상에 제대로 나서지 않고 있다" 라며 "사측이 하청 노동조합을 절대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라고 지적했다. 사측이 '하청 노동조합과 교섭을 통한 임금인상이라는 선례를 만들 수 없다' 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용우 위원장은 "원청인 대우조선해양은 교섭 책임이 없다고 말하지만, ILO나 국제규범은 원청이 실제 노동조건을 결정할 권한이 있으므로 교섭 의무가 있다고 지속해서 천명하고 있다" 라며 "원청에 교섭 책임이 있다는 주장은 노동법 학계에서 이론의 여지가 없다" 라고 잘라 말했다.

이용우 위원장은 "사용자 불법은 명확하고 하청노동자와 노동조합의 불법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에서 정부가 불법 운운하는 태도는 매우 자본 편향된 태도다" 라고 꼬집었다.

이용우 위원장은 대우조선이 손해배상 책임을 강조하며 배임죄를 들고 나오는 행위는 '무리한 주장' 이라고 일축했다. 헌법은 노동삼권을 보장하고, 쟁의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지지 않도록 면책조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용우 위원장은 "지금까지 면책 합의를 이유로 사용자가 배임죄로 기소당한 전례가 없다" 라고 밝혔다.

정부와 사회가 노동자가 파업할 권리, 생존과 존엄에 관한 권리를 위해 적극 역할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랄라 다산인권센터 상임활동가는 "이제 우리는 노동자들이 왜 이렇게 투쟁할 수밖에 없었는지 착취구조에 주목해야 한다" 라면서 "정부나 기업이 책임 있는 자세로 평화로운 해결을 위해 책임을 다해야 한다" 라고 강조했다.

랄라 활동가는 "2주간 인권 조사 작업을 하면서 무권리의 일터가 노동자의 삶과 권리를 어떻게 파괴하는지 확인했다" 라며 "조선산업 전반의 하청업체 현황과 전체 하청노동자에 관한 실태 조사가 필요하다" 라고 제안했다.